국민의힘 "李대통령 셀프 면죄부"… '조작 기소 특검법' 집중포화

"시기 조율로 위헌이 합헌?… 與, 유권자 기만 민낯

국민 눈 가린채 권력 면죄부 시도… 반드시 투표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장외에서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을 두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며 "시기를 조율한다고 위헌이 합헌 되냐"고 날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주문했고, 정청래 대표는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논리는 단 하나, 6.3 지방선거가 코앞이니 일단 미루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셀프 면죄부 특검법은 본질적으로 위헌"이라며 "특검이 다루게 될 12개 사건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일 뿐더러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범죄 혐의 사건을 제수사하며 심지어는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셀프 면죄부를 넘어 법치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자,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라며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시기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 이것이 국민 유권자를 기만하는 민주당의 민낯이 아니고 무엇이겠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어떤 권력자도, 어떤 다수당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말은 '선거 이후 논의'가 아니라 '반헌법적 법안의 즉각 철회'"라며 "진정 대한민국 국민의 표심이 두렵다면, 법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인경 대변인도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 이제 본인 죄는 지워야 하나"며 "과거에는 법치를 말하더니, 지금은 자신만 예외가 되려 한다면 국민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긴 것은 자신의 죄를 덮을 권력이 아니라 나라와 민생을 살릴 책임"이라며 "나라의 구조적 위기는 산적해 있는데, 민생·경제·외교·안보보다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는 일이 먼저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 눈을 가린 채 권력의 면죄부부터 완성하려는 시도야말로 민주주의를 향한 오만"이라며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해당 법안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초유의 입법"이라며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균형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라"고 '연합뉴스 TV'를 겨냥했다.

이어 "헌법학계와 형법학계내에서도 위헌성과 권력분립 침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연합뉴스TV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반대 입장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은 채 특정 성향 학자의 일방적 의견만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편향적 보도를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취지에 반할 소지가 크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헌법적 논란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균형 잡힌 판단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식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연합뉴스TV측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특검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었다.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나왔다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김동아 의원이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각각 특검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무죄 세탁'하기 위한 특검 법안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받아쳤고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 질의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깊이 논의해 결정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특검 추진 규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특별검사'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이어 박민식도 "한동훈과 단일화 제로" 일축

朴 "'착시효과' 하정우·'선점 효과' 한동훈 거품 빠질 것"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6일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에 "단일화를 주야장천으로 외치는 분들은 대부분 한동훈 전 장관의 측근들"이라며 "가능성 '제로'(0%)"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부산 사람들은 이기든 지든 딱 승부가 나는 걸 걸 좋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후보측이)단일화하거나 무공천해라, 또 다른 사람하고 연대 등 이런 레퍼토리를 돌린다"라며 "갑자기 선거를 목전에 두고 '보수 재건' 명분으로 들이닥친 건데 황당함을 넘어 우리를 무시하나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일화 논의는 제가 시쳇말로 '꿈 깨라' 한마디로 정리하겠다"라며 "'착시효과' 하정우(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점효과' 한동훈은 둘 다 거품이 빠질 일만 남았다"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와 단일화 없이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보수, 중도, 진보(비율을) 3:4:3(로 분석하는) 서울 평론가들의 전형적인 정치공학적인 셈법"이라면서 "이번 선거 주인은 북구 주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하 후보, 한 후보 모두 선거 한달 앞두고 내려와 구포시장에서 물건 사주고 사진 찍어주면 (주민들이)좋아하겠지,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북구 주민들은 자존심까지 구기거나 내팽개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구는 제 가족이 거의 50년 이상 살고 있고 저를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만들고 장관도 만들어주신 곳"이라며 "북구가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제가 이번에 반드시 북구의 힘으로 승리해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한지아 의원 등 한 후보 지원에 나선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원칙을 가지고 제명했던 인사"라고 한 후보를 규정하면서 "(한 후보와)연대는 다른 당과의 연대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이를 두고 한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 동행한 한지아 의원 등 당내 친한계를 겨냥한 경고라는 지적과 함께 친한계가 공개 반발하면서 당 내홍이 재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이 우리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 단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전체 보수 진영이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필요한 건 징계가 아니라 화합"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현진 의원은 "억지 제명으로 쫓아낸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사람"이라며 "한지아 단속이 아닌, 감표 요인인 당 지도부 출장 단속이 필요한 때"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당이 한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이 분열의 시발점이 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 징계는)당이 원칙을 갖고 제명한 사안"이라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사법쿠데타… 권력 사유화 넘어 반헌법적 행위"

국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

"범죄세탁 시도 배후 본인 자백"

李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

6.3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여당의 주도로 추진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민주당은 온 국민이 지방선거에 관심을 집중한 틈을 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의 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틈을 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개인 면죄부로 악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이번 특검법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며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쥐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1년 전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했던 대통령이 특검법 철회 촉구가 아니라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충격적 입장을 냈다"며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이 두려운지 시기 조절만 운운하고 있다"며 "결국 이 범죄 세탁 시도의 배후에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문제와 관련해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경기 동두천른시장 방문 이후 특검법안 처리 시점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4일)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청와대가 여당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고개 숙인 이용 "비상계엄 진심으로 사과"… 하남갑 출마 선언

"상처 책임에 자유롭지 못해

국민 회초리 피하지 않을것"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등과 관련해 울먹이는 목소리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명하지 않겠다. 국민께서 주시는 회초리를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정권 창출은 정당의 존재 이유였고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했다"라며 "그러나 그 정권이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지금 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을 만드는 일에 함께 했다면 그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하남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하남에 나온 사람의 대결"이라며 "하남은 철새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둥지가 아니다. 우리 하남시민들도 하남 출신 정치인을 키워 당당한 하남 발전을 꿈꿀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상대 담 후보인 이광재 후보에 대해 "강원에 뼈를 묻겠다고 하고, 분당에서는 분당을 책임진다더니 이제 하남을 책임진다고 한다. 철새 정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민은 네겹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며 "민생은 무너지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권력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고 이재명 정권의 오만을 견제하겠다"라며 "법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담의 절윤 결의에 동감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담에서 전원이 절윤한다고 했다면 담 일원으로서 마땅히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함께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사기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조배숙 의원, 특별법 대표발의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투자 리딩방, 쯘지사기 등 조직화·지능화된 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수사 실효성 제고: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강력한 수사 특례 도입 ▲범죄수익 환수 강화:범죄와의 개연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범죄재산 추정 및 몰수' 규정 마련 ▲주범 검거 유도:조직내 가담자의 자백과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사법협상제도(플리바게닝) 도입 ▲전문성 강화:금융·회계·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를 '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수사 대응력 보강 등을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이번 법안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조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1만3000여명이 소속된 사기 피해자 단체인 '한국사기예방국민회'와 5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 피해 사례와 고충을 법안에 녹여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25년 8월 국회 촉구대회와 11월 현직 법관·경찰·법무부가 참여한 공청회를 거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

조 의원은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절박한 문제"라며 "날로 고도화되는 사기 기법을 현행 사법 체계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범죄가 더이상 '감옥에 다녀와도 남는 장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강력한 체계를 구축하여 사기 범죄를 뿌리부터 근절해야 한다"며 "이번 민생법안은 여야를 떠나 서민들의 피해에 깊이 공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 "하나로 힘 모아야"… 범여권 단일화 제안

6.3 지방선거를 한달 가량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가 '범민주진영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은 간절하다. 줄세우기와 고립되고 폐쇄된 기득권 카르텔로 형성된 불공정한 시민 사회를 시민 주인, 시민 중심 민주도시로 재건해야 한다"며 "이 사명을 해내기 위해서는 범민주진영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AX 대변환 앞에 노동의 가치와 시민의 이익을 지키며 산업 AX 대변환을 선도해야 한다"며 "덤이 아니라 연결로 울산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복지와 문화, 보육, 의료, 대중교통 등 무너진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한다. 간절하고 절박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선거 승리를 넘어 시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해내야만 한다"며 "이것은 시민의 명령이며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중앙당 및 시당의 단일화를 독려하고 지켜봤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더욱이 우리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제(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개별 후보 차원의 단일화 논의를 차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제 개별 후보 차원의 단일화로 짝 막혀 있는 단일화 논의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개별 후보자 자격으로 울산광역시장 후보 범민주(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단일화를 더불어민주당의 우당이며 범민주의 동지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 공식 제안한다"며 "시민의 진정한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되는 방식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실무협의를 통해 함께 결정하면 된다. 당장 내일이라도 실무접촉을 시작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신 김두관 전 경남도 지사님께 단일화 협의 과정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다"라며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울산시장 후보님들의 조속한 답변과 실무협의를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반민주를 몰아내고 함께 민주도시 울산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민주 후보들은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단일화해야 한다"며 "시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인 단일화를 우리가 완수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